

월/요/광/장



전찬용

얼마 전 세계의 성장을 이끈 IT산업의 황제, 빌 게이츠가 물러났다. 새 산업을 일으켜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이룩하고 세상을 바꿨으니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이다. 그때 문득 세계경제에 IT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됐듯, 다음 시대를 이끌 산업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바로 광주·전남이 먹고 살아갈 10년, 20년 뒤의 먹거리, 일거리는 무엇일지에 대한 궁리로 이어졌다.

실마리를 IT산업이 나왔던 때로 돌아가 찾아보면 IT산업이 태동하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우리는 전통적 제조업분야에서 선진국을 쫓아가는 중진국이었던. 그때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구호가 우리의 정신을 번쩍 나게 했다. 전 문화부장관 이이령 선생이 특유의 통찰력을 발휘해 만든 이 구호는 현대, 삼성, LG, KT, SK 등 대기업의 뛰어난 경영진, 기업가정신으로 넘치는 젊은 벤처기업인들에 의해 실행됐다. 정보통신부 등 정부도 이 비전을 실행하고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가 IT 최강국으

로 우뚝 선 것은 비전 있는 리더십과 집중적인 실행의 승리였던 셈이다.

이제 광주·전남으로 돌아오면 앞으로 세워야할 우리의 먹고 살 공리는 현재 남들이 하고 있지 않거나 태동 단계인 산업에서 찾아야 하고 또 우리에게 그 산업을 일으킬 기반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그 것 중 하나가 새 에너지산업이다. 물론 에너지를 생산하는 새 에너지산업은 기존의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풍력, 조력, 태양광 에너지나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유엔은 새 에너지산업이 2012년 4천 500억달러, 2020년 6천억달러의 세계시장이 열린다는 전망치를 내놨다. 전문가들은 19세기에 골드 러시가 있었다면 21세기에는 새 에너지산업의 "그린 러시"가 펼쳐질 것이라고 한다. 현재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 기업 1, 2, 3위가 모두 석유에너지 기업들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새 에너지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광주·전남은 좀 더 진취적이고 과감한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 설계의 근간 가운데 하나는 새 에너지산업으로 잡아야 한다. 광주·전남이 에너지산업을 키우는 일에 모든 이해와 역량을 쏟아보자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선 이미 새 에너지 산업의 새싹이 자라고 있다.

정부가 입안한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서 신 재생 에너지산업은 핵심 4대 사업 중 하나다. 얼마 전에는 거센 물살의 물풍목에 신선했고 2006년부터 신입생을 받아들여 소리 소문 없이 수소연료전지 등의 새 분야를 개척해 가고 있다. 이 같은 새싹들을 끝나무로 집중 육성하려면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먼 미래를 향한 결단이 필요하다.

정보화만은 앞서가자는 리더들의 결단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 광주·전남의 리더들은 지금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 알다시피 우리는 돈이든 고급 인력 이든 넉넉하지는 않다. 정보화를 추진할 때의 대한민국 형편도 그랬었다.

결국, 문제는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고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리더십이다. 민·관·산·학·연·정 여러분의 수고 덕분에 서남권발전법이 '신 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의 이름으로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해 이제는 시행령이 입법되고 중이다.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니 지역의 리더십이 다시 한 번 발휘되어야 한다.

빌 게이츠의 탄생은 그가 다니던 레이크사이드 사립학교가 당시로서는 드물게 컴퓨터를 입대한 결단에서 비롯됐다. 광주·전남 주민의 새 에너지산업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우리 동네의 빌 게이츠를 키워낼 것이다. <현대기아차 인재개발원장>

에서 조력발전 기반시설 설치가 성공했다.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가 될 것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금 노와라, 똑딱'의 도깨비 방망이가 될 것이다.

전남 서남권은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이 가장 좋은 곳이다. 전남 서남해안에서 부는 바람의 질은 제주도과 강원도 산간에 못지 않은 고른 에너지를 갖고 있어 풍력발전의 최적지다. 우리 지역에 전국 최초의 수소 에너지화학도가 있음을 알고 있는가? 수소는 미래에 가장 가치있게 쓰일 에너지원이다. 바로 2005년에 동신대학

광주·전남의 '빌 게이츠'

시 설

전남 10조 '투자협약' 실제투자 이끌어야

전남도가 약 10조원 규모의 투자협약 '대박'을 터뜨렸다. 지난 3일과 4일 서울에서 열린 제 1회 지역투자박람회에서는 13개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9조5천500억여원의 투자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 같은 투자협약 규모는 전국 16개 시·도의 전체 투자협약액(18조9천200억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사상 유례 없는 성과다.

이번 투자협약은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 엄청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미국 트러스트그룹 차이나텔레스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에 45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은 J프로젝트 사업에 청신호를 켜는 것으로 남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문제는 투자협약 가운데 얼마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냐는 점이다. 투자협약은 투자의 의향을 서로 확인하는 수준인 만큼 실제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전남도의 투

자협약 실행율은 절반이 겨우 넘는 52.4%에 불과했다.

전남도는 투자협약 실행율을 높이는 데 모든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 투자협약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윈스톱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실제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투자협약은 전남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안 하느니만도 못할 수 있다.

전남도의 투자협약 '대박'은 기존 사업을 끼워넣었다는 '부풀리기' 논란이 있지만 J프로젝트 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던 게 우리의 판단이다. 투자실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일은 앞으로 전남도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투자협약은 전남이 낙후에서 벗어나 한 황해권의 거점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전남도는 이번 투자협약이 구두선(口頭禪)에 그치지 않도록 모든 지혜를 짜내야 바라다.

에너지 절약 국민 모두가 적극 실천하자

정부가 어제 1단계 '초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1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출력제와 공공시설물의 경관 조명 사용 금지,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가로등 격등제 등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자율적 에너지 절약을 권장하며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강제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비상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국제유가 급등세는 심상치 않다.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섰고 전분기부터는 곧 15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가 공포가 전 세계에 엄습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유가 동향은 '제 3차 오일 쇼크'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당초 150달러를 넘어서면 발동기로 했던 1단계 위기관리 조치를 앞당겨 시행한 것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승용차 출력제 같은 경우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시행된 적이 있지만 고유가에 따

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원유 소비국 으로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출력제와 공공 시설물의 경관 조명 사용 금지,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가로등 격등제 등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자율적 에너지 절약을 권장하며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강제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고유가를 극복하려면 기업과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로서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수밖에 없다.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정부가 당초 단계별로 4단계 비상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1단계 조치는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국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 고유가 파동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틀 주순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박창식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구호를 누구나 한번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의약분업 이전 서로 전문분야를 지키고 약물의 과잉 사용 억제와 환자의 보건권을 지켜내기 위해 의사와 약사 그리고 시민단체 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피어나 당시 격언이 된 문구이다. 병원에서의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짓는 것은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화됐다. 그러나 위 문구만큼이나 중요한 격언은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라는 것이다. 내 직업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나를 격상시키거나 직업적 홍보를 하기 위함

지 처방전에 따라 약을 받을 뿐이다. 법률적 문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변호사를 접견하라는 것이다. 바쁘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날 수 없다는 말은 옛말이다. 최초 사건수입단계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만나 사건관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 만약 변호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회피한다면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부득이 수입단계에서 변호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사건 진행도중이라도 반드시 만나야 한다.

또한, 반드시 승소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곳에 의뢰를 해 개인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

는 절대 아니다.

병원을 찾는 개인들은 단순한 감기에서부터 중병으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까지 처치방법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은 이혼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넘어서 자기의 전 재산이 걸려 있거나 사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더 나아가 인신구속에 관련된 형사사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몸이 아프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병원에서 담당의사에게 자기의 환부를 드러내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한 뒤 그에 적합한 처방을 받고, 그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전 재산이 걸려 있거나 어쩌면 이혼을 당해 가족을 잃어야 할지도 모르거나 인신구속에 당할 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들은 누구 찾아 상담을 하고 있는가?

환자들은 절대 간호사에게 상담을 받지 않는다. 단지 안내만 받을 뿐이다. 환자들은 약사에게 상담하지 않는다. 단

병원 용어 쉬운 우리말로 사용했으면

최근 연료하신 할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의사로부터 환자 상태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의사는 "환자는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다. 개두술 후 뇌부종, 뇌혈관연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의사는 보호자에게 열심히 설명했지만 아이들을 수없었다. 다시 알아듣기 쉽게 말해 달라고 하자 "뇌를 싸고 있는 막과 뇌 사이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머리를 열고 파리의 목 부위를 클립으로 묶어 더 이상 피가 파리로 들어가서 다시 출혈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 후에는 뇌가 부을 수 있다. 또 뇌종양이 좁아져 혈액 순환이 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가 됐다. 왜 진작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병원의 환자 기록 차트도 영어 일색이다. 병원과 의사들은 자신들만 아는 영어를 쓸 게 아니라 우리말로 풀어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해주길 바란다.

▲오동은·광주시 동구 금동

국세의 지방세 전환, 능사 아니다

를 심화시키는 소위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전남도는 재정자립도(11.0%)나 지방세 수입(3천843억원)이 전국 최하위다. 자체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전국 29개 기초단체 가운데 10개 단체가 전남도에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제 일부를 지방세로 일괄적으로 떼어주는 세계개편을 단행할 경우 전남은 SOC확충, 미래산업 육성, 관광진흥 등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여수세계역소 유치권을 계기로 고조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분위기에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 지방 살림을 돕는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지방교부세 교부율의 인상이야 한다. 현행 내국세의 19.24%인 교부율을 2%인상하여 21.24%로 하는 안이다.

기 고

허영철

이 경우 전남도는 약 800억원의 세입이 증가하게 된다.

둘째, 국고보조금을 포괄적 국고지원 제도로 전환토록 개선해야 한다. 즉 관광, 농업, 건설 등 분야별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배분함으로써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

셋째, 국고보조비율의 상향 조정과 차등보조율제 적용이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경우 현행 50%의 국비지원율 80%수준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요구되는 등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넷째, 매칭펀드(Matching Fund) 사

가려져서 이젠 일체를 찬양하고 안고 있다. 평화주의자들이 전쟁을 거부하고 징집을 기피하는 경우는 고금을 막론하고 계속돼왔다.

역사가 기록된 최초의 병역 거부자는 서기 295년 로마군에 의해 처형된 북아프리카인 막시밀리아누스. 그는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내 종교에 반한다"는 기독교정신을 대머로 마군 징집을 거부했다.

'시민불복종운동'의 태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846년 미국이 멕시코와의 전쟁을 일으키자 즉각 '국가의 법이 내 양심이 금지하는 것을 명한다면, 내 양심이 우선해야 하는 것'이란 가라는 글을 썼다. 이후 그는 전쟁 비응으로 사용된 인두세 납부를 거부한 뒤 "감옥 가기에 지금처럼 좋은 때도 없다"라며 감옥행을 택했다.

무하마드 알리는 "베트남 사람들은 나에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들과 싸울 이유가 없다"며 징집을 거부하다 챔피언 벨트를 박탈당했다. 1970

닭도리탕은 일본색 말 아닌 순수 우리말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억지이고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닭도리탕은 '닭'과 '원'을 잘라내라는 의미의 우리말 '도리아'의 '도리'에다 탕이 합쳐진 복합어로 보아야 한다. 즉 닭고기를 작은 고깃덩어리로 도리질 하여 찌거나 삶아내는 요리인 것이다. 작은 부분으로 나누다, 작게 파내다의 뜻을 가진 '도리아'에서 나온 어간 '도리'를 전혀 관련성 없는 일본어 도리(鳥)에다 갖다 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

일제의 잔재는 털어내야했던 순수하고 좋은 우리말이 일본어로 지목되고 엉뚱하게 해석돼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병희·광주시 복구 신용동

닭도리탕은 일본색 말 아닌 순수 우리말

사회의 곳곳에 일제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언어다. 예전에는 건설현장 용어가 일본색 투성이였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고 다른 분야도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많이 고쳐졌다.

하지만 그 와중에 순수 우리말이 일본어와 비슷하다고 해서 억지로 고치려는 잘못된 사례도 있다. '닭도리탕'이 그것이다.

닭도리탕은 '닭+도리(鳥:일본어로 새를 '도리'라 함)+탕'이 결합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닭과 새를 의미하는 도리가 중첩된 것으로 '닭새탕' 또는 '닭탕탕'이 된다 것이다. 그래서 도리라는 별 대신 '닭복음탕'이라고 쓰자는 것이 주된 요지다.

無 等 鼓

전쟁의 희생자, 혹은 피해자로 떠돌 수밖에 없지 않는가.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었지만 몰라도 전쟁은 당신에 게 관심이 많다." 러시아혁명 당시 적군(赤軍) 총사령관이었던 트로츠키는 볼셰비키 혁명 참전을 독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사회의 마이너리티(소수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방부가 내년 부터 시행할 예정인 대체복무제에 대해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양심적 자유와 병역의 의무 사이의 간극을 메울 솔로몬의 해결책은 참으로 멀다. /주승우 사화1부장 joh@kwangju.co.kr

전쟁의 희생자, 혹은 피해자로 떠돌 수밖에 없지 않는가.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었지만 몰라도 전쟁은 당신에 게 관심이 많다." 러시아혁명 당시 적군(赤軍) 총사령관이었던 트로츠키는 볼셰비키 혁명 참전을 독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사회의 마이너리티(소수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방부가 내년 부터 시행할 예정인 대체복무제에 대해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양심적 자유와 병역의 의무 사이의 간극을 메울 솔로몬의 해결책은 참으로 멀다. /주승우 사화1부장 joh@kwangju.co.kr

| | | | |
|---|---------------------------------------|-------------------------------------|-------------------------------------|
| 光 卍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 |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 | | |
|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www.kwangju.co.kr | |
|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 사 회 2 부 2200-619 < F A X 227-0118> | 경영지원국 2200-511 < F A X 222-8005> | 문화홍보국 2200-541 < F A X 222-0195> |
| 편 집 부 2200-629 | 문화생활부 2200-626 | 광고이케팅국 2200-521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정 처 부 2200-616 | 여론제작부 2200-628 |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 경 제 부 2200-617 | 체 육 팀 2200-627 | 디 자 인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사회 1 부 2200-618 | 사 진 부 2200-690 | | < F A X 02-773-9335> |
| < F A X 222-4267> | 조 사 부 2200-570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